

추정부 첫 국감... 민주당, '尹정부 실정론' '내란 청산' 강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를 부각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관련 국정감사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선 전 환경국립대 교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은 특히 강경파로 구성된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15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국정감사 기조 "내란 잔재 청산" 내세워

조직대 대법원장 겨냥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방어전도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풍의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다.

하지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만약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

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증 공세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일반증인·기관증인 채택을 시도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를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막판까지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국감도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한 뒤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지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뉴스1

'소상공인 회복정책' 약발 있다... 중기부 송곳 국감 예고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유통 등 쟁점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수장으로 낙점된 한성숙 장관이 국정감사(국감) 시험대에 오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오는 14일 중기부 국감을 진행한다.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정책 철학과 방향성 등을 검증 받는다.

올해 역시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효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중기부는 지난달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중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에 5조527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이어진 계급과 탄핵 정국 속 벼랑 끝에 몰렸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두 차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근본적인 회복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감에서는 현재 중기부가 진행 중인 지원 3종 세트(메즈 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및 소상공인회복 등 현금 사업의 실효성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 방식도 검증 대상 중 하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로 인한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병·의원(1777개, 348억 3000만원) 결제액이 76%를 차지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수혜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여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규모와 과제중단에 따른 매출비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한 한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23일 진행된다. 피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창업진흥원(창진원) 등 총 11곳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부실금액)은 2조830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미회수금 또한 벌써 5000억 원에 육박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자금 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자중기위는 14일 국감에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이주철 W컨셉 대표, 이수진 야놀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판매자 간 거래 공정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등을 추궁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소상공인 비용 전가 관련 질의를 받는다. /뉴스1

국감 앞둔 여야, '김현지 출석' 공방... "진실 밝혀야" vs "불순한 정치공세"

여야가 1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의 최종 책임자는 비서실장인데, 그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여야, 내주 국감 앞두고 김현지 실장 출석 공방 이어져
여 "장승 트리블 브라더스가 김 실장 체급만 키워" 비판
야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 모든 의혹 당당히 해명하라"

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추석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대통령실 인사 조치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김 실장은 단순한 공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제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에게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

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번갯불이듯 만들려는 오만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고 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출석시키기 바란다"며 "김 실장 역시 몇몇하다면 국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당당히 해명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

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배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문고리 권력, 비선 실세가 불러온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 실장은 지

금이라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번의 비선 국정농단을 방치한 정당이 대통령실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참모를 두고 '실세 위의 실세'로서 '실질적 안방마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실이자 후안무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최순실, 김건희를 비롯해 온갖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여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다. 그때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침묵과 방조를 넘어 방탄조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며 "인수위원

회조차 없이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의도다. 또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연석 원내대표 소위 '장승 트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매직 상승시킨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세력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체급도 맞추고 공격 포인트 설정도 잘 챙기셔야만 지금 트리블 브라더스의 불명예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